

'테라·루나' 권도형, 한국 송환 가능할까?

'미국 인계' 권도형 항소 받아들여져 법무부 "아직 공식 통보받지 못해"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2) 테라플렉스 대표가 한국과 미국 중 어느 국가로 인도될 지 다시 판단을 받게 되면서 한국 송환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6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에 따르면 항소법원은 지난 5일(현지시간)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했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

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1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공지했다.

항소법원은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과 관련해 중대한 형사소송법 위반 사항이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인도 요청서 도착 순서에 관한 사실관계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항소법원은 한국이 3월24일 영문으로 작성한 범

죄인 인도 요청서를 제출했고, 이를 뒤에는 몬테네그로어로 이를 재차 송부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당시에 미국은 이보다 하루 늦은 3월27일 인도 청구를 했고, 이마저도 범죄인 인도가 아닌 임시 구금 요청 서한이었다고 지적했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내면서 권씨가 한국으로 올 가능성이 생겼다. 한국 정부가 범죄인 인도 청구를 먼저 한 사실이 공식 확인되면서 송환 우선순위에서 우위를 가지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재심리 결론이 언제 나올지, 한국이 인도국으로 결정되더라도 실제로 언제 송환이 될지는 아직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아직 몬테네그로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관련 대응에 대해선 "외교부와 긴밀히 협력해 범죄인의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만약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에서 다시 미국 인도 결정을 내린다면 권씨 측이 재항소할 가능성이 높다. 권씨 측은 한국의 인도 요청 시점과 권씨의 국적 등을 근거로 한국 송환을 주장해왔다.

이 경우 송환 절차는 더욱 늘어질 전망이다.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 1년째 해외 도피 생활을 하던 중 지난해 3월 위조 여권을 사용하며 혐의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체포됐다.

함께 도주한 권씨 측근 한창준(37) 전 차이코퍼레이션 대표는 지난달 5일 한국으로 송환, 같은 달 2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완도해양경찰,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 실시

완도해양경찰서(서장 이영호)는 최근 공직자의 음주·숙취운전의 경각심 고취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해 "음주운전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 송준표 기자



고흥경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앞두고 공직선거법 교육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지난 5일 소회의실에서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순천경찰 역전파출소, '신학기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 홍보활동'

순천경찰서(서장 국승인) 역전파출소는 최근 새학기를 맞아 순천 관내 풍덕초등학교, 중앙초등학교 방문하여 학교 앞 정문 등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 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했다.

순천=김승호기자



구례소방,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 화염사를 지키는 문화재경비원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지난 4일 화염사 문화재경비원에 대한 안전교육 및 소방훈련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양소방, 2024년 상반기 현장 대응능력강화 소방전술훈련 평가

광양소방서(서장 정각욱)는 4일, 5일 양일간 일선 센터 및 구조대 현장출동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반기 소방전술훈련 평가를 실시했다.

광양=기동취재본부



진도소방, 진도 쏘비치리조트 소방안전교육 실시

진도소방서(서장 박진조)는 5일부터 7일까지 진도 쏘비치리조트 종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도=조상용 기자

"면접 보러 가니 주6일 요구"...불공정 채용 281건 적발

고용부, 지난해 하반기 구인공고 등 627개소 점검 결과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하반기 중 '워크넷' 구인공고, 건설현장, 청년 다수고용 사업장 등 627개소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은 281건의 위법·부당 채용 사례를 적발해 과태료와 시정권고 등 조치를 단행했다고 6일 밝혔다.

채용절차법은 ▲거짓 채용광고 금지 ▲채용광고 내용 및 근로조건 변경 금지 ▲부당한 정략·압력 등 채용강요 금지 ▲채용 심사비용 부담 금지 ▲채용서류 요구 시 반환 의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채용절차법은 직무와 관련 없는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고 있는데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부모·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등이 해당한다.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주5일 근무로 공고한 뒤 계약 시 주6일 근무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는 근로조건 변경 위반으로, 구인자는 구직자

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 공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해서는 안 된다.

채용 탈락자 수십 명의 서류를 파기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채용 공고에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 회사도 있었다. 신체검사 비용 등 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전가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반환 청구 기간이 지난 이력서 등 서류는 파기하도록 해당 회사에 시정 명령하고, 신체검사 비용은 구직자에게 환급하도록 조치했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출신 지역 등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표준 이력서를 사용할 것을 권고했다.

고용부는 이번 점검에 그치지 않고 워크넷 상에 위법한 공고를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이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사업주에게는 구인 광고를 등록할 때 법 준수 사항을 알람창으로 안내하고, 구직자에게도 '직무

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개인정보 금지, 채용서류 반환 및 파기 절차' 등 반드시 알아야 할 고지 사항을 신설해 알린다.

아울러 부적절한 개인정보 수집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구인 광고는 자동으로 걸러낼 방침이다.

이 밖에 민간 취업 포털에 대해서는 연 2회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현장 지도 및 점검으로 연계한다. 민간 포털이 자체적으로 법 위반을 방지하는 시스템을 개발하도록 협업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온라인 채용 공고가 채용절차법을 준수하도록 해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채용결과 고지, 채용서류 파기 알람 등이 포함된 '공정채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공정채용법은 현행 채용절차법의 법제명을 변경하고, 채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다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오유나 기자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훈련

육군 52사단 장병들이 6일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24년 FS/TIGER 연습 등의 일환으로 국가중요시설 대테러 훈련을 하고 있다.

동부취재본부 김승호 기자

전남 외국인전용클럽서 불법 체류자 70명 적발

전남의 산업단지 밀집지역 내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유출 점객원을 비롯한 불법체류 외국인 70명이 무더기 적발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서해해양경찰청, 목포해양경찰서와 합동으로 지난 3일 새벽 전남 영암군 소재 외국인전용클럽을 압수수색해 유출점객원으로 불법취업 중인 외국인 2명을 비롯해 불법체류 외국인 총 7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전용클럽에서 '외국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고 다수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손님으로 방문한다. 일부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을 하며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민원 제보를 받고 범법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됐다.

적발된 외국인 전용클럽은 외국인 전용 예약제로 운영 중이었다. 영업 중에도 출입문을 이중으로 잠근 채 입구와 주변 도로에 설치한 폐쇄회로(CC)TV 영상 등으로 사전 예약한 외국인으로 확인될 때만 문을 열어줬다. 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이 같은 영업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온 것으로 보고 있다.

적발된 불법체류 외국인 70명은 모두 강제 퇴거된다. 향후에도 입국금지 예정이다. 클럽 운영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할 방침이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관계자는 "단속을 회피하는 외국인 전용클럽·유형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등을 통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